국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3선 이상 의원 22명 의견 모아
이준석 대표 징계 '사고'로 결론
장제원 등 '윤핵관' 의원들 불참

국민의힘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와 배현진(왼쪽)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으면서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1일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향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론은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의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권 원내대표가 소집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참석 대상자 28명 가운데 22명이 자리했다.

당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서병수·주호영·김영선 의원,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당 지도부에 속한 윤영석·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원내지도부에서 권 원내대표와 함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윤상현 의원, 김학용·권은희·김도읍 의원 등 6명은 불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전환 없이 6개월 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궐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임시전대나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두분이 거취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자는 말씀이었다"며 "윤리위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는 게 맞다는 게 전원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고위 의결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두 세분 계셨다"며 "이미 최고위에서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최고위 간담회 두 차례를 통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렸고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할지, 집권여당이 보다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가져가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게 맞다는 게 현재 당 사무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기정 시장 "광주 공약 채택되도록 민주 전당대회 적극 대응"

18일 국민의힘과 예산협의회서
국가 주도 복합쇼핑몰 형태 제시
광주시정 밑그림 구체화 속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행정은 정치의 한 조각"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어제로 시작됐다"며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광주 이슈,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채택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들이 찾아오면 설명하고, 안 오면 간부 등이 직접 찾아가(광주 발전 계획 등을)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행정에도 유능하고 정치에도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면서 "18일 예정된 국민의힘과 예산 당정협의회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의도 정치를 충분히 활용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과 예산 협의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추진할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강 시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며 "시에서 새로 생길 쇼핑몰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제시하는 게 중요한 만큼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취임 후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이끌 사업, 조직, 인사 준비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사업 분야는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35개 공약사업과 관련해 실·국 별로 실현 가능성, 이행 절차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 1단계 추진 기간이 종료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 실시설계 예산 확보는 물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기업 유치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활력 분야로 분류된 복합쇼핑몰은 국가가 지원하고, 투자 기업을 유치해 행정에서 신속히 인허가하는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약사업인)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조성 사업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기본 설계비를 요구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 같은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완성했으며,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책전략, 광역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을 키워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신활력추진본부를 만들었으며, 뉴딜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광주 1도 낮추기 팀', 관광 부서 '스토리텔링 팀' 등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부서(팀)명을 시민 친화형 명칭으로 변경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10조 9390억원 추경안 도의회 제출

본예산보다 8920억 원 증가
지방소멸 막기 378억원 투입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등 전남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 속에서 지방 공멸을 막기 위해 378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연구도 본격화한다.

전남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조 939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6109억원, 보통교부세 1287억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1297억원이다. 국비 지원 없이 전남도 자체 사업을 위해 1670억원 규모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810억원)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2170억원) ▲지방소멸 대응 및 행복전남 실현(990억원) ▲전남문화·관광 융성(440억원) ▲재해복구 및 지방도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4510억원) 등이다.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비로 10억원을 편성했고,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 용역 등을 위해 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항만운송 인프라 확충에도 4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들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시설·입지보조금 6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남청년문화센터(4000만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82억원), 공공산후조리원(80억)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남의 대표 행복시책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도 5억원 늘려 올해 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 방문의 해에 맞춰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달성을 위한 홍보 사업(9억원) 등을 추진하고 순천만정원박람회(2023년) 성공개최(79억원), 영·호남 화합대축전(8억원) 등도 지원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국회 안 열리면 민생특위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의장 정무창·부의장 심철의·이귀순

심철의 1부의장

이귀순 2부의장

제9대 광주시의회가 11일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전반기 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정무창(광산2) 의원이 전 의원 만장일치(23표)로 당선됐다.

정 신임 의장은 "시민의 삶과 생활을 우선에 두는 민생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의원 간 협업, 청렴한 의회, 연구하며 일하는 의회 상을 제시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1부의장에는 단독 후보인 민주당 소속의 심철의(서구4), 제2부의장도 민주당 소속인 이귀순(광산구4) 의원이 각각 18표, 22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 추대한 후보인데도, 민주당 재적 의원(22명)에 미치지 못한 표를 얻었다.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행자위는 임미란·정다은·박필순·채은지·명진 의원, 환복위는 조석호·최지현·이명노·박미정·서용규 의원, 산건위는 김나윤·안평환·홍기월·박수기·강수훈·김용임 의원, 교문위는 신수정·심창욱·이귀순·박희율·서임석·심철의 의원이 배치됐다.

시의회는 15일 상임위원장, 21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행자위원장은 임미란 의원, 환복위원장은 조석호 의원, 산건위원장은 김나윤 의원, 교문위원장은 신수정 의원 등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민주당 합의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초선인 강수훈 의원, 예결위원장은 초선인 박희율 의원이 내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